

보도 일시	2023. 1. 17.(화) 14:00 (브리핑 시작시)	배포 일시	2023. 1. 17.(화) 10:00
담당 부서	수산정책실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서기관 김도순 (044-200-5662)

귀어귀촌 문턱 낮추고 초기지원 확실하게... ‘인구유입’ 최우선으로

- 해수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 발표 -

- ☐ 초·중·고생 어촌유학, 어(漁)케이션 20개소 조성 등 어촌 관계인구 확대
 - 어촌유학(초·중·고 학생), 어촌문제 해결형 수업(대학생), 어촌 살아보기(성인), 어촌 자산 투자펀드(투자자) 등 다양한 관계인구 형성
- ☐ 어업인을 포함해 다양한 업종에 귀촌 지원
 - 수산업 분야로 한정된 정착자금 지원을 관광, IT 등으로 확대하여 어촌형 로컬 크리에이터 등 어촌창업 활성화
- ☐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추고 자생력 강화
 - 어선·양식장 임대, 육상양식장 거래시스템 도입
 - 초기 소득 보전을 위한 정착자금 확대 및 금융·회계 컨설팅, 6차 산업화 등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18~’22)을 수립하여,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개소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①, 청년어촌 정착지원^②, 어선청년임대사업^③ 등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하여 2017년 991명 대비 약 23% 증가하였다.

① 수산업분야 창업(3억원), 주택구입(0.75억원)에 대한 자금 융자(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② 청년 귀어 창업자 대상 정착자금 지원(3년, 월 최대 110만원)

③ 청년이 어선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 50% 지원(2년, 월 최대 250만원)

다만, 1차 종합계획은 어업과 양식업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귀어인을 위한 대책 중심으로 어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비어업인 귀촌인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귀어 희망자가 느끼는 진입장벽 역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1 :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 제고 >

첫째, 어촌 관계인구^①를 확대하여 귀어귀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늘린다. 어촌 살아가기, 4도(都) 3촌(村) 프로그램 도입(어촌마을에 주 3일 동안 머물며 어촌생활에 익숙해지게 돕는 프로그램), 어(漁)케이션^② 20개소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초중고생 대상 어촌유학, 대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문제 해결형 수업 등을 도입하여 어촌에 대한 청년과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한다.

①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에 기여하는 사람들(방문빈도 높은 관광객 등)

②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를 뜻하는 워케이션과 어촌의 합성어

둘째, 어선, 양식장, 유희부지 등 어촌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 자산 투자 펀드^①를 조성하고, 어촌형 클라우드 펀딩^②을 도입하여 어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의 관계인구로 확보할 계획이다.

① 민관 공동 출자로 어촌자산 투자펀드 조성, 투자금으로 어촌자산(어선, 양식장)을 구입하고, 구입한 자산은 귀어인에게 임대·이전한 후,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

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귀어인 생산물 공동구매(후원형), 어촌마을 기부(기부형) 등으로 소액투자 유치

셋째, 귀어귀촌 희망자의 성향, 역량을 거주 희망 어촌의 정보(자연 환경, 주력 수산물 등)와 결합하고 분석(AI, 빅데이터 활용)하여 맞춤형 귀어귀촌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귀촌시 직·간접 지원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 ('24) 귀어귀촌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통합 플랫폼 운영('25)

< 전략 2 : 어촌 일자리 창출 및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촌인구 확대 >

첫째,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이 선호하는 해양레저(요트, 스킨스쿠버 등)프로그램과 청년 전문가가 많은 프로그램(해변요가, 해변조깅 등)을 개설^①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양양 서피비치와 같은 어촌형 로컬크리에이터^②를 양성하고, 기존 수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지원되던 정착자금^③을 관광, IT 등 분야로 확대하여 다양한 어촌창업을 활성화한다.

① 어촌체험마을 특화조성 '27년까지 20개소(연간 4개소, 개소당 6억원, 국비50%)

②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산을 소재로 창의적인 사업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③ 귀어 창업주택구입 지원(연 3.75억원 융자), 청년어촌정착지원(월 최대 110만원, 3년지원) 등

둘째, 젊은 귀촌인의 재능과 마을주민들의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많은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우수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귀촌인과 어촌마을 간 융화를 도모한다.

* 우수어촌계지원('23, 10억원) : 개방성 높은 어촌계가 필요로 하는 시설, 장비 지원

셋째,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문화 공간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 공동이용 시설로 조성하고, 어촌의 중심 인프라인 국가어항 내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 등을 통해 어촌의 경관을 개선한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도 설치한다.

* '27년까지 25개소 선정(연간 5개소) 및 순차적 사업 착수(개소당 국비 100억원 내외)

< 전략 3 : 진입장벽 완화와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귀어인구 증대 >

첫째,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23.6.28.시행)에 따른 시행령 마련

둘째, 귀어를 위한 정책 자금도 귀촌부터, 취·창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①하되, 귀어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지원자금의 사용과 융자금 상환계획 등에 대한 경영, 회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가단위의 6차산업화 모델^② 발굴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단순 실습을 포함하여 5주 내외로 진행되던 귀어학교 교육도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③하여,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한다.

① '27년까지 확대(귀촌 초기)청년어촌일자리마련(신규, 월 150만원, 2년) → (창업 초기)창업자금 융자(3→5억 확대) → (정착)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기존 110→150만원, 3→5년 확대)

② 어업, 양식업과 연계 가능한 가공, 유통, 음식점, 체험, 관광 등

③ 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재 7개소인 귀어학교를 '27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하고 장기 교육생에게 귀어인의 집 우선 입주권 등 부여

셋째,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①을 확대하고, 청년,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임대주택 단지에는 문화공간, 쉼터, 공동 육아돌봄 시설 등을 갖추어 청년과 여성친화형 복합주거단지로 조성^②한다.

① 귀어인의 집(개소): ('22) 6→('23) 6→('24) 42→('25) 90→('26) 90→('27) 66

②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23~'27, 유형2-어촌 정주·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조성)과 연계하여 조성

< 전략 4 :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

첫째, '24년부터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하여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통해 귀어귀촌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어촌 정착 초기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한다. '23년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귀촌인 연합회 설립도 지원하여 정부와 귀어귀촌인, 그리고 어업인 단체 간 소통을 확대한다.

셋째, 어업·양식업 등 실습교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별 귀어귀촌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 관련 교육과 교육생 대상 보험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7년까지 향후 5년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어촌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하였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요약)

2022. 12.



해양수산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3~’27)

I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추진 배경

- (법정계획) 「귀어귀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주요내용) 귀어귀촌 현황과 전망, 귀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귀어귀촌 실태조사, 귀어귀촌인 교육훈련·주거·생활 및 어업경영에 관한 지원사항 등

- 「제1차 종합계획(‘18~’22)」 종료에 따라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귀어귀촌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23~’27)」 수립

- (소멸대응) ‘어촌 활성화 대책(‘21.9)’,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22.9)’ 등에 귀어귀촌 전략을 더해 어촌소멸 대응 강화

II 「제1차 종합계획」 평가

- (주요 성과) 3단계 정책 추진으로 귀어귀촌인 증가

* 귀어인 수(명) : (‘17) 991명 → (‘22) 1,216명(22.7% ↑)

- 귀어귀촌 예산 확대(‘17년 4,119백만원 → ’22년 6,663백만원, 38.1% ↑) 및 3단계 정책체계별로 성과 창출

* (관심) 귀어귀촌 박람회(매년)를 통한 귀어귀촌 상담 건수 증가(‘18년 1,182→ ’22년 2,093건)
(준비·실행) 귀어학교 신설(7개소) 및 귀어학교 운영비 국비지원(70%) 실시
(정착) 귀어인의 집 신설, 어선청년임대사업 실시 등으로 어촌 진입장벽 해소 중

- (보완방향) 홍보 부족으로 인해 귀어귀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귀어(어업·양식업 등)에 편중된 정책은 귀촌인 정착지원에 한계 노출

-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도 다소 미흡했고, 어촌계와 귀어귀촌인 간 소통 지원도 부족

□ 정책 수립방향

- 先귀촌-後귀어를 통해 어촌 유입인구를 확대하고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다양화

□ 주요 개선사항



□ 「제2차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비전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
목표	◆ 어촌의 매력과 인지도 제고를 통한 어촌 유입인구 확대 ◆ 귀어 진입장벽 해소로 만족도 제고
추진전략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
도시민 접점 확대 알고 싶은 귀어 쉽게 얻는 정보	① 국민과의 접점 확대로 귀어귀촌 인지도 제고 ② 어촌 관계인구 확대 ③ 도시 자본의 어촌투자 경로 확충
귀촌인구 확대 가고 싶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	① 젊은 일자리 만들기 ② 어촌주민과 귀촌인이 화합하는 어촌 조성 ③ 살기 좋은 어촌으로 새단장
귀어인구 증대 하고 싶은 귀어 하기 쉬운 귀어	① 귀어 교육과정의 표준화·전문화 ② 귀어인 취창업 집중 지원 ③ 귀어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주거 지원
거버넌스 구축 찾아가는 행정 함께하는 행정	①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② 귀어귀촌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③ 안전한 귀어귀촌 시스템 구현

1. [도시민 접점 확대] 알고 싶은 귀어, 쉽게 얻는 정보

① 국민과의 접점 확대로 귀어귀촌 인지도 제고

- 귀어귀촌 브랜드 개발*, '어촌생활을 콘텐츠로 하는 크리에이터 양성', 재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및 박람회 내실화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귀어귀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유발을 위해 슬로건·로고·심볼·캐릭터 등으로 구현

** 「고령자고용법」(고용노동부)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창업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필요

- AI·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능형 귀어귀촌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도시민이 쉽게 귀어귀촌을 결심하도록 유도

② 어촌 관계인구* 확대

*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출향민, 재방문 빈도가 높은 관광객 등)

- 어촌 살아보기(다변화), 4都 3村 프로그램 도입, 워케이션* 20개소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어촌생활 경험 제공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를 뜻하는 워케이션(wokation)과 어촌의 합성어

- 초·중·고생 대상 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학생 대상 계절학기 연계 어촌체험,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과 접점 확대

* 방학 기간 단기유학을 우선 운영하고, 어촌유학센터(어가에서 돌봄·교육 등 부모 역할 수행) 지정 등을 통해 장기유학(1학기 이상)으로 확대

③ 도시 자본의 어촌투자 경로 확충

- 어선·양식장·주거단지 투자가 가능한 어촌자산 투자 펀드* 조성, 어촌마을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으로 도시 자본 유치

* 일정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준귀어인(귀어인 지원정책 중 일부 혜택 제공) 지위를 부여해 귀촌 유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귀어인 생산물 공동구매(후원형), 어촌마을 기부(기부형) 등으로 소액투자 유치

2. [귀촌인구 확대] 가고 싶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

① 젊은 일자리 만들기

-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으로 청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을 적극 유치하고, 민간 취업정보업체를 활용해 어촌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강화

* 해양치유마을(요가강사, 명상강사), 해양레저마을(레저강사, 안전요원), 문화예술마을(예술가) 등

- 어촌형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어촌 정착지원 대상 업종을 현재 수산업·해양레저에서 관광, I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지역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사업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중기부)

② 어촌주민과 귀촌인이 화합하는 어촌 조성

- 귀촌인 특기와 마을 수요를 매칭하는 재능기부 플랫폼 도입 및 귀어귀촌인 다수 유치 어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융합 지원

* 우수어촌계지원('23, 10억원) : 개방성 높은 어촌계가 필요로 하는 시설, 장비 지원

③ 살기 좋은 어촌으로 새단장

- 어촌·어항* 주변 환경정비와 공공디자인 적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외도서의 여객선-육상교통 연계성 강화

* (CLEAN 국가어항) 어항에 방치된 어구쓰레기를 정리하고 낙후시설 보수('27년까지 25개항)

- 어촌(섬 중심)만의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정립해 생활서비스 거점센터에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성어업인 권익*도 보장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대상 확대, 어촌생활돌봄 도우미 등 생활돌봄 서비스 강화

- 어선 입항부터 수산물 하역·보관까지 자동화한 스마트 어항과 ICT·드론·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IT 인프라 개선

3. [귀어인구 증대] 하고 싶은 귀어, 하기 쉬운 귀어

① 귀어 교육과정의 표준화·전문화

- 현재 중복되는 귀어 교육기관 간 교육과정을 특화하고, 인턴십이 포함된 장기교육(6개월)을 신설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귀어인 육성
 - * 귀어귀촌종합센터(기초 이론교육), 귀어귀촌지원센터(단기 실습교육), 귀어학교(장기 실습교육)
- 어촌정착상담사 자격요건 강화(면허제 도입), 귀어 교육기관 강사 전문성 보완 및 마을별 멘토-멘티 지정 등을 통해 교육 역량 강화

② 귀어인 취창업 집중 지원

- 어선청년임대사업을 '매입-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형 양식장, 육상양식 시설 매도·매수 중개시스템 등으로 귀어인 초기 부담 완화
- 귀촌부터 창업까지 귀어인에 대한 전주기 지원책을 강화하고, 귀어인의 어업 외 소득 증진을 위한 6차 산업화*도 지원
 - * 귀어인 대상 6차 산업화 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체험관광 어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

③ 귀어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주거 지원

- 임시거주시설(귀어인의 집), 빈집 리모델링, 청년·여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 등을 조성해 귀어인이 겪는 주거불안 해소
 - * 귀어인의 집 설치계획(개소) : ('22) 6 → ('23) 6 → ('24) 42 → ('25) 90 → ('26) 90 → ('27) 66
- 임대주택 지원으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및 문화 공간·쉼터, 공동육아돌봄 시설 설치 등 청년·여성친화형 복합주거 단지로 조성
 - * 주민 간 정보 공유 및 친목 도모 등 소규모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시설 등 '어촌 상생 커뮤니티센터'도 조성해 신·구 주민 공동체 융합활동 독려

4. [거버넌스 구축] 찾아가는 행정, 함께하는 행정

①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 및 방식으로 실행하고('23), 국가승인 통계로 등재 추진

* (현행) 귀어인은 해수부 어업경영체 명부 활용, 귀촌인은 통계청 귀촌인 명부 활용
(개선) 귀어인은 통계청 귀어인 명부 활용, 귀촌인은 통계청 귀촌인 명부 활용

② 귀어귀촌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 귀어귀촌 지원기관 간 역할 분담 명확화*, 정부와 귀어귀촌인의 가교 역할을 할 귀어귀촌인 연합회 설립 등을 통해 귀어귀촌 행정 효율 제고

* 귀어귀촌종합센터(컨트롤타워), 귀어귀촌지원센터(지원), 귀어학교(기술교육)

- 귀어귀촌 지원기관을 한 곳에 모은 거점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조성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 추진**

*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공동체, 주요어종, 어업기반, 어업외기반, 생활기반 등

** (예) (경기)어촌갯벌생태관광, (강원)해양레저 접목 어촌관광, (경북)스마트양식 등

③ 안전한 귀어귀촌 시스템 구현

- 어업·양식업 기자재 실습교육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고, 교육생 대상 보험상품도 제공
- 어업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 예방 제고를 위해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대상에 귀어귀촌 희망자도 포함·확대

* 안전 전문 교육강사·응급처치키트 지원, VR을 활용한 실습교육 등